

차례

정낙추 만평

노인과 아이가 어울리면 마을이 살아난다 5

편집인의 글

충남의 농촌마을정책이 가야 할 방향 7

문화로 만나는 마을 이야기

[사람, 책을 읽다]

중과부적衆寡不敵: 김사인 시집을 읽고 | 장은성 19

[나는 마을에 삽니다]

마을에서 위로를 주고받는 영화감독 박영임 씨 | 이준표 22

특집 | 마을교육공동체: 학교와 마을은 어떻게 만날까?

마을 안에 있는 학교, 학교 밖에 있는 마을 | 김정섭 29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정책의 현재와 과제 | 김은경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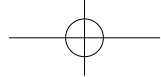
마을교육공동체의 '만루홈런'을 꿈꾸다 | 서승욱 49

꿈꾸는 소년이 꿈을 키우고 꿈꾸는 어른이 꿈을 여는 마을교육공동체 | 서량 56

마을이 학교이어야 합니다 | 양도길 62

작은 학교의 추억: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치초등학교 | 박영혜 69

차례 | 3



지상중계

[제1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의 기록]

『마을독본』, 우리는 이렇게 활용한다

79

마을 소개 | 우리 마을이 달라지고 있어요

꽃향기 가득 즐거운 마을, 예산군 신양면 무봉리 | 조혜진

101

지원센터 활동보고

작은국제학술행사 1: 농촌 마을의 에너지 자립과 산림 바이오매스

111

작은국제학술행사 2: 지역복지와 마을만들기의 융복합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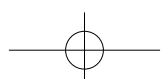
충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상반기 직무연수회

115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현황 및 연락처

117

4 | 차례



정낙추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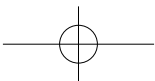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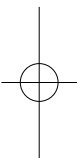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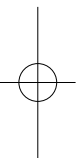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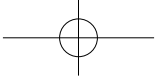
노인과 아이가 어울리면 마을이 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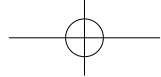


*정낙추

태안문화원장으로 일한다. 시인이자 농부이고, 소원면 모항1리 이장을 맡고 있다. 전통소금인 '자염'을 복원했고, 충남작가협의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흙빛문학』에 대하소설 『풀의 역사』를 연재 중이며, 시집 『그 남자의 손』과 『미움의 힘』, 소설집 『복시는 울지 않았다』를 출간했다.

정낙추 만평 | 5





편집인의 글

충남의 농촌마을정책이 가야 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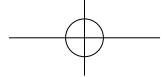
구자인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청와대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난 4월 1일(월)에 청와대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란 형식이었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여하는 제법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마을만들기’를 대표하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잘 나서지 않는 성격이라 사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고 발언 기회도 준다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은,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들이 ‘부처별 칸막이’ 안에서 제각각 추진 중이다 보니, 공무원 순환보직제 문제와 겹쳐서 오히려 마을자치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논의되어왔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도 계류 중인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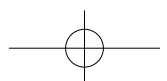
충남의 농촌마을정책이 가야 할 방향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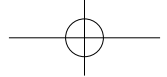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읍면동 단위로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 쪽이나 국회에서 일부 야당의 반대와 부처이기주의로 더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의 역할을 요청한 셈입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가치를 담고, 정책융복합을 중시하며, 민관협치를 강조하는 국가 정책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자치역량은 계속 성장하는 반면, 행정은 민관협치의 관점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상호 불신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 순환보직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열려 있는 제도적 장치(예를 들어, ①공무원 필수보직기간, ②직위공모제, ③전문직위제(전문직위군), ④임기제/개방형 공무원 등)이라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어도 3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여 민관협치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문제인식도 비슷했고, 공감도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부겸 장관이 다음과 같이 일부 답변했습니다. “기본법은 후임 장관에게 적극 검토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또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3만 명 서명운동도 5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본법 제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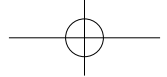
‘농촌 유토피아 구상 현장워크숍’에서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 9일(화)에는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권역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이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후원하는 ‘농촌 유토피아 구상 현장워크숍’이 있었습니다. 40명 정도 예상했던 행사에 80명 정도가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성경룡 이사장(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 균형발전위원장)이 전체를 주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 등의 중앙부처, 그리고 여러 국책연구원이 결합하는 대형 연구프로젝트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도 토론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저도 “돌아오는 농촌마을, 현장실천주체 만들기”란 제목으로 충남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농촌정책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며 충남이 앞서서 5년째 추진해오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의 경험과 시사점도 소개하였습니다. 본 지면을 빌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지원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 칸막이를 극복하고,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며, 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읍면동 단위의 정책 융복합을 위해서라도 민관협치의 제도적 시스템 설계가 꼭 필요한 셈입니다. 특히 ‘농촌 유토피아’와 같은 큰 구상과 전환을 염두에 둔다면 추진 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 설계가 핵심 과제이며, 충남의 현재 경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째, 농촌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법·제도적 근거 확보가 시급한데,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니 농식품부 소관의 ‘삶의질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요한 국가 정책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할 추진 주체가 핵심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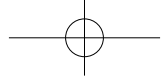
근자의 인건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재정분권 로드맵과 연계하여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과 행정의 칸막이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 공무원의 순환보직제가 가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제도적 장치라도 적극 활용하고, 또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도적 정비는 발 빠르게 중앙 주도로 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면,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중간지원조직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습니다. 저의 이런 건의는 ‘구절’처럼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천의 경험에 바탕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셈입니다. 물론 여전히 쉽게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비판도 낙관도 금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계속하여 두들기고 주장하며 전환의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3농정책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지난 4월 4일(목)에는 충남도 3농정책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분과위원장이신 박경 교수님(목원대)이 강력하게 요청하여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올해 들어 도청 조직 개편으로 농촌활력과가 신설되고, 또 3농정책위원회도 재편되어서 농어촌분과위원회도 신설되어 농촌 마을만들기와 도농교류, 6차산업 등이 연계·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었다는 것이 개최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정기회의라기보다 도농교류팀(7명), 마을가꾸기팀(11명), 농촌융복합산업팀(18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상견례의 성격이었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4개 팀이 업무보고를 했고, 이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농업6차산업센터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좌장을 맡은 박경 교수님의 제안으로 거의 모든 분에게 한마디씩 발언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있었고, 대체로 첫 만남이지만 이런 자리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정책의 칸막이를 넘어 융복합과 협업을 해야 하고, 국비 사업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만의 브랜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올해 10월에 농어촌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3농 정책포럼이 열릴 예정인데, 아마도 이런 방향에서 주제가 정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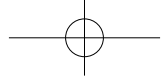
매년 4월에 열리던 3농혁신대학 마을만들기과정이 없어져 많이 아쉽지만, 이런 정책 융복합을 강조하는 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동안 충남의 농촌마을정책은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업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촌활력과도 신설되고 3농정책위원회도 재편되어서 융복합과 협업의 가능성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앞으로 열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고 널리 확산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올해 4개 시군에서 공동체 전담과科가 신설되었습니다

작년 7월 민선 7기가 출범함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직 개편이 논의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기의회를 통해 조례가 통과되고 올해 1~2월에는 정기인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경향이 있지만 농촌 마을만들기 관점에서 보자면 공동체 전담과科를 신설한 다음의 4개 시군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융복합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의 총괄조정부서 신설(지정)은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의 10대 핵심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기에 각 사례를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1) 청양군 사례

청양군은 여러 경로의 토론을 거쳐 농촌공동체과를 신설했습니다. 주무팀은 공동체기획팀으로 주민자치를 핵심업무로 하고, 삶의질정책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푸드플랜팀과 공공급식팀이 배치되어 농산물 유통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농촌지역정책 전반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습니다. 또 농촌개발팀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하드웨어 부분을, 농촌활력팀은 체험휴양마을과 6차산업을 핵심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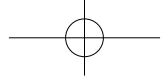
이렇게 청양군은 5개 팀으로 농촌공동체과를 구성하여 농촌지역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하고, 사회적경제나 도시재생, 귀농귀촌 등의 정책과는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무 팀인 공동체기획팀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담당하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활동영역이 주민자치(읍면 계획), 푸드플랜/공공급식(마을 단위 생산자조직화), 농촌개발(마을 하드웨어 정비), 농촌활력(체험휴양마을, 6차산업) 등과 연계할 가능성이 넓어진 셈입니다.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농교류센터, 공공급식센터,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 (재)부자농촌지원센터 등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2) 공주시 사례

공주시는 주민공동체과를 신설했습니다. 자치분권팀(주무 팀), 사회적공동체팀, 마을만들기팀, 새마을단체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무 팀이 주민자치 업무를 핵심으로 하는 것은 청양군과 동일합니다. 신설 예정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사회적공동체팀에서 담당하는데,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별도 설치 예정인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팀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역량강화사업은 사회적공동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주무 팀에서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본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3) 논산시 사례

논산시는 마을자치분권과를 신설했습니다. 자치새마을팀(주무 팀), 마을



자치팀, 마을사업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단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산시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새로 신설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마을자치팀에서 총괄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전 명칭으로 기반조성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논산시에서는 희망마을건설과 희망마을팀(농업기반정비), 마을사업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드웨어), 마을자치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등 3개 팀으로 분리·발전되어 왔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논산시도 읍면동 주민자치와 마을자치를 연계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강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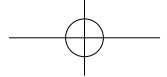
4) 서산시 사례

서산시는 시민공동체과를 신설했습니다. 주민자치팀(주무 팀), 혁신분권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도농통합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신설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리고 향후 예정인 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통합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한 4개 시군은 모두 주민자치 업무를 주무 팀으로 하는 공동체 전담부서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여기에 농촌 마을만들기 업무가 강력하게 결합해 있고, 앞으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공통됩니다. 물론 조직 개편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10대 핵심과제와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이나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4개 시군은 첫 단추를 잘 꿰 셈이라서, 앞으로의 발전을 크게 기대해봅니다.

네트워크 법인 설립, 이제 민간도 칸막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4개 시군 사례 외에도 행정 지원체계 정비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웃 전라북도는 2014년에 이미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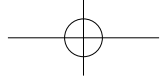
촌활력과를 신설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농촌정책을 전담하는 농촌활력과를 설치했습니다. 충남은 전북에 비해 느린 셈이지만, 전북과 달리 주민자치 업무와 강하게 결합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충남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이미 10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올해 중에는 3~4개 더 설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군 센터의 상근자는 총 44명(수탁법인 포함)으로 평균 연령은 34세입니다. 올 연말에는 광역센터를 포함하여 총 70명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공익활동이나 도시재생·사회적경제 등과 연계해서, 통합형의 중간지원조직 사례도 늘어나고 그만큼 상근 활동가의 거점 공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간의 네트워크 법인 설립이라는 과제는 매우 더디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되지 않으니 행정 직영의 중간지원조직이 민간으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홍성·천안·보령·예산 이외에는 모두 행정 직영의 지원센터입니다. 이 상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행정도 칸막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민간의 칸막이 극복이 어찌면 훨씬 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청와대 건의사항부터 시군 공동체 전담부서 설치 사례까지 장황하게 소개한 이유는 결국 이런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마을과 마을이 모이는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설립, 그리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수탁을 염두에 둔 네트워크 법인 설립, 이 두 가지는 민간 스스로 풀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아마도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구축’ 10대 핵심과제 중에서 가장 큰 난제가 민간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과 역량 강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숙제이지만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걸음씩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이번 호부터 『마을독본』이 몇 가지 전환을 하느라 봄호 발간이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전문편집위원을 새로 영입하고 제2기 편집위원회도 새로 구성했습니다. 또 출판사도 바꾸고 마을



학회 일소공도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해서 저희 센터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마을독본』이 농촌 마을만들기의 전국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따끔한 비판과 애정 넘치는 지지를 기대합니다. 『마을독본』이 여러분의 현장 실천을 도와줄 학습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대화마당’에도 적극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즐기시고 농사일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